

# ‘이재명 1심 재판 선고’ 유·무죄 놓고 정치권 긴장

오늘 오후 선거법 혐의 선고 결과 따라 대권 가도에 영향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무죄시 중도층 공약 탄력 전망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당내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가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시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허위 사실이 아닐 뿐더러 행위가 아닌 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아울러 선거법 제265조의2 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사 사칭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기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위증 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을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당내에선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얘기다.

하지만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대권주자 위상이나 당내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자’ 이미지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무죄가 나오면 당내 입지가 공고해 되고, 사법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소돼 중도층 공약에 힘을 얻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민주, ‘상법 개정안·검찰 압박법’ 당론 채택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준비해 온 ‘상법 개정안’과 검사 및 검사 가족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검찰 압박’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이 나와서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조건을 달아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에서 모든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직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재직 중 정지

하고, 퇴직 후 진행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이 가족 행위로 사망 등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도 발의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을 하게 하는 등 경우도 포함돼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법안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시효 중단이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반영하기로 했다”며 “수사, 기소 담당 공무원과 그의 가족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을 꼭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APEC·G20 참석차 출국 APEC 정상회의(페루)와 G20 정상회의(브라질)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환송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야권 주도...여당 표결 불참 거부권 행사시 28일 재표결 이진숙 감사 요구안도 통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군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후 세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야 6당의 재석 의원 19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 분열용 품수 악법,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토론을 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

에게 부여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중 2명을 추천하며,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다만 추천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군씨 관련 의혹 2가지다.

명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선거·이권·인사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다.

명씨를 통한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김 여사의 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총선 개입 의혹, 명씨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표결의 의결을 위해선 여당 내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음주 운전 사고 후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 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은 제안 이유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장관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당정, 쌀 56만톤 공공비축·시장격리

‘쌀값 반등 대책’ 당정협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56만톤을 하고, 벼멸구 피해해 등을 연내에 매입 완료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쌀값 반등 대책과 관련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급 과잉에 따른 쌀수급 불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가장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공공비축 및 중간 정산금도 올해 4만원으로 상향했고, 벼매입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 더 증가한 4조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올해 벼멸구 등 피해작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 상승폭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확기 작황과 정부대책 등으로 산지 쌀값 하락폭은 완화되고 있으며, 11월5일자 산지 쌀값은 보험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확기 동안 공공비축미국과 시장격리곡을 포함한 약 56만톤과 피해 벼를 연내 매입하고 수급 상황이 쌀값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점검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